

검찰 불기소에 불복… 법원 문 두드리는 고소인들

광주고법 재정신청 매년 급증…작년 600건 넘어
수사 불신에 법관 부담만 늘어…“설명·절차 중요”

최근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든 A씨는 한동안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수개월 동안 이어진 수사 끝에 돌아온 답은 ‘혐의 없음’이었다. 분명 피해를 입었다는 확신이 있었지만 사건은 그 자리에 멈춰버린 듯했다. 항고마저 기각됐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 허탈함과 분노가 뒤섞였다. 그럼에도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A씨는 마지막 희망을 불합당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택했다.

검찰의 잇단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신이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수사 결과에 납득하지 못한 고소·고발인들이 대거 재정신청에 나서며, 광주고등법원이 사실상

검찰 판단을 다시 묻는 ‘마지막 심판대’로 돌리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고법에 접수된 재정신청 사건은 총 60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504건에서 97건이 늘어난 수치다. 2023년에도 468건을 기록하며 증가 흐름을 보였고,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건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피의자의 유·무죄 판단과는 별개로 반드시 공소가 제기돼 정식 재판 절차가 진행된다. 검사의 기소 독점에 대한 사법적 통제 장치이자, 수사 결과에 불복한 이들이 선

택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수단으로 여겨진다.

광주 한 변호사는 “본인은 분명히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데, 수사기관에서 ‘혐의 없음’이 나오면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며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가 예전만 못한 상황에서 고소인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을 받다 보니 그대로 납득하기 어려운 당사자들의 심리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매년 재정신청이 늘어나면서 법원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광주고법에서는 수년째 판사 3명이 재정신청을 검토했고 있는데, 판사 1인당 처리 건수는 2023년 평균 156건에서 지난해에는 200건으로 증가했다.

다만 재정신청 인용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광주고법 인용률은 2023년 1.5% (약 7건), 2024년 1.3% (약 7건), 지난해 1.4% (약 8건)로 큰 변화가 없다. 재정신청 접수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실제로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하는 비율은 전체의 1%대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법원은 재정신청 판단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강제로 공소가 제기되는 구조인 만큼, 무리한 기소로 인한 피의자의 권리 침해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고법 한 판사는 “재정신청 사건은 기록만으로 판단해야 하고, 검찰의 불기소 판단을 뒤집을 만큼 명확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유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공소 제기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신청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은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재정신청을 제기한 이들 상당수는 “결과보다 과정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문

제의식을 공통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법조계에는 사법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매년 재정신청 등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재정신청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전담 재판부를 확대하거나, 공소유지를 검찰이 아닌 별도의 주체가 맡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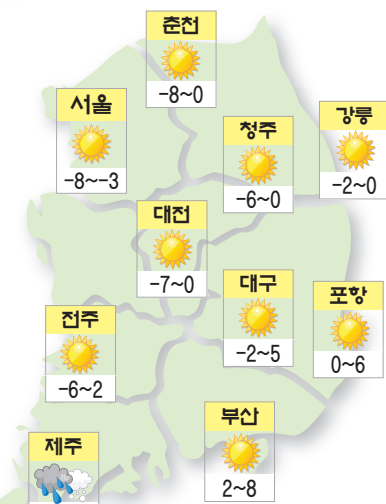
다만 현재 뚜렷한 제도적 대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법원은 사건 추이를 지켜본 뒤 정기간사 시기에 맞춰 겸임 인원을 늘리는 사무분담 조정을 통해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법원 관계자는 “재정신청까지 오지 않도록 하는 사법적인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불기소 결정이 왜 내려졌는지에 대해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절차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예보 07:28 맑음 22:41
예보 18:06 맑음 09:37



광주		-4~2
목포		-3~-1
여수		1~7
순천		-2~6
구례		-2~5
광주		2~2
임도		-2~4
흑산도		-1~0
진남		-3~6
진도		-2~0

목포	미물 (고)	04:58 / 17:19
	샘물 (저)	10:06 / 22:30
여수	미물 (고)	11:55 / --:--
	샘물 (저)	05:37 / 17:53

호남 의사회 ‘응급환자 이송 시범사업’ 반발

“응급실 뺑뺑이 원인은 의사 사법리스크… 현장 의견 배제”

‘응급실 뺑뺑이’를 줄이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두고, 시행 대상자인 호남권 의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계는 응급의료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책임을 의료진에게 전가하는 구조라며, 오히려 지역 응급의료체계 붕괴를 앞당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광주·전남·전북 의사회는 5일 공동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이 추진하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시범사업은 탁상공론에 불과한 독단적 정책”이라며 “응급실 뺑뺑이의 근본 원인을 외면한 채 시행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광주·전남·전북을 대상으로, 119구급대가 병원 응급실에 개별적으로 전화해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던 기존 방식을 대신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의료자원을 실시간 공유하는 플랫폼을 통해 이송 병원을 직접 지정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환자 중증도는 Pre-KTAS(응급환자 분류체계) 기준에 따라 5단계로 분류되며, 시범사업 종료 후 평가를 거쳐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호남권 의사회는 “결국으로는 시스템 혁신처럼 보이지만, 실제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의 판단과 책임은 더욱 무거워진다”고 반발한다. 특히 병원 수용 여부와 전원 과정까지 광역상황실이 관여하는 구조가, ‘수용을 거부한 의사가

문제’라는 단순한 프레임을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계가 짚는 응급실 뺑뺑이의 핵심 원인은 ‘사법 리스크’다.

이들은 “최선을 다해 진료했음에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형사 책임과 수사를 감수해야 하는 구조가 지속되는 한, 응급의료 현장에서 의사들은 점점 더 방어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이송체계 개편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호남 지역의 구조적 취약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격오지와 의료 취약지가 많은 지역 특성상 중증 환자가 뒤늦게 발견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이 같은 상황에서 확실적인 이송 지침을 적용할 경우 응급의료시설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까지 의료진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지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센터는 과밀화가 심화돼 오히려 응급 처치가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의사회는 “지침은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발표됐고, 실제 현장을 책임지는 응급의료 담당 의사들은 속의 과정에서 배제됐다”며 “시범사업을 강행하기보다 응급실 뺑뺑이의 원인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공공외교 실천하는 전남학생외교관 전남학생공공외교교수 271 학생외교관 22명이 지난 1월 22~30일 미국 워싱턴·뉴욕·샌프란시스코 일대에서 국외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학생들이 국제사회 주요 현안을 현장에서 직접 탐구하는 학생외교관으로서 공공외교 활동을 수행하는 데 중점을 뒀다. 사진은 샌프란시스코 워터뷰 기립비에서 학생외교관들이 한화 및 추모 활동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제공=전남도교육청

전남 초등생 4480명 감소…학급 81개 줄어

개별 맞춤형 교육·학생 성장 단계별 지원 강화

전남지역 학령인구 감소 영향으로 초등학생 수가 큰 폭으로 줄면서 초등학급 학급 수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반영해 2026학년도 도내 유·초·중·고등학교 학급 수를 총 1만664학급으로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1142학급, 초등학교 5023학급, 중학교 2196학급, 고등학교 2303학급으로 편성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유치원 26학급, 초등학교 81학급, 중학교 11학급이 각각 줄었고, 고등학교는 4학급 늘었다.

전체 학생 수는 지난해 18만3369명에서 올해 17만6598명으로 6771명 감소했다. 특히 초등학생 수가 4480명 줄어 전체 감소 폭의 약 66%를 차지하며 학령인구 감소 현상이 초등 단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번 학급 편성은 학령인구 감소 상황

속에서도 학생 개개인 맞춤형 교육 여건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고 전남도교육청은 설명했다.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전년도보다 0.6명 줄어 평균 14.3명 수준으로 낮아졌다. 중학교는 평균 20.9명, 고등학교는 19.6명 수준이다.

전남도교육청은 학급당 학생 수 감소 추이를 반영해 개별 맞춤형 교육과 학생 성장 단계별 지원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학생 수 추이와 교원 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급당 학생 수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미래교육을 위한 최적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

“외국인 처녀 수입” 논란

만민필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위

한 전남 서부권 타운홀미팅 생방송에서 김희수 진도군수가 ‘외국인 처녀’를 수입 대상으로 표현해 논란.

지난 4일 오후 해남문화예술관에서 전남 서부권 주민을 대상으로 한 타운홀미팅에서 김 군수는 인구소멸 대응책 관련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광주·전남이 통합할 때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을 법제화해야 한다”며 “스리랑카나 베트남 쪽 젊은 처녀를 수입해 농촌 총각 장가도 보내는 등 특별 대책을 내려야 한다”고 발언.

김 군수의 발언과 모습은 이날 방송사 등을 통해 전국으로 생중계.

이후 김 군수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식을 약속.

그는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의 발언 중 실수를 했다”며 “이번 발언으로 상처를 받았을 분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해명.

해남=성정수 기자 sj8239@

“지역소멸 위기…국제이주자 마을 조성이 해법”

전남대, 이주민 500만 시대 지역소멸 위기 대응 리빙랩

광주 고려인마을·나주 영산포 등 사례 집중 조명
거주지 넘어 경제·문화 거점…중장기 전략 필요

지역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제이주자를 단순한 노동 인구가 아닌 지역의 구성원으로 포용하는 ‘국제이주자 마을’ 조성이 중장기 대안으로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국제이주민의 정주를 통해 지방 도시들이 지역 활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전남대학교 ‘국제이주민 500만 시대 지역소멸 위기 대응 리빙랩’(책임교수 김재기)은 최근 광주 광산구 월곡동 국제

이주민지원센터에서 공유 세미나를 열고, 광산구 월곡동과 전남 나주 영산포 등 국내 국제이주민 밀집 지역의 정책 사례를 집중 조명했다.

세미나에는 지자체 관계자와 학계, 현장 활동가 등 국제이주·디아스포라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이주민 정책의 현주소와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국제이주민 거주지를 지역 경제와 문화의 거점으로 발전시킨

사례들이 소개됐다.

김병학 고려문화관 ‘결’ 관장은 광주 고려인마을이 역사·문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전국적인 탐방지로 성장한 점을 소개했다. 특히 고려인마을 내에 위치한 고려문화관은 2021년 개관 이후 3만여명이 방문하며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역사와 삶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나주 영산포의 사례도 주목을 받았다. 백다례 아트스페이스영산포 이사장은 “나주 인구의 약 15%가 국제이주자”라며 “특히 영산포에 형성된 동남아 이주자들이 단기 노동 체류를 넘어 정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장기 마을 조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주 여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도 이어졌다. 임영연 전남대 교수는 월곡동 고



전남대학교 ‘국제이주민 500만 시대 지역소멸 위기 대응 리빙랩’은 최근 광주 광산구 월곡동 국제이주민지원센터에서 공유 세미나를 개최했다.

려인 상권의 자영업 실태를 분석해 경제적 자립 가능성을 짚었고, 이지현 고려대 박사는 이주민 노동 특성이 장기 정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교육·고용 안정이 핵심 변수라고 진단했다. 전득안 국제이주민지원센터 박사는 이주민 2세대의 교육 문제와 세대 계승 과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주민 정착에서 ‘정체성’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김재기 전남대 교수는 월곡동에 거주하는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동포들이 소장한 족보를 바탕으로 조상 뿌리를 찾아온 사례를 소개하며 “정체성 회복은 장기 정착의 중요한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독립운동 사료 발굴과 서훈 전수

문제를 언급하며, 고려인 동포 후손들이 역사적 연결고리를 통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독립운동가 1만8664명 가운데 41%는 후손을 찾지 못해 서훈이 전수되지 못했고, 러시아 지역 서훈자의 경우 전수율은 더 낮은 상황이다. 이는 해외 디아스포라와의 단절이 여전히 깊다는 점을 방증한다.

종합 토론에서는 국제이주자 마을이 지역소멸 위기를 겪는 지방 도시의 ‘필수 전략’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참석자들은 민·관·학 협력을 기반으로 한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과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재기 교수는 “농촌과 어촌, 산업단지, 대학가까지 국제이주자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국제이주자 마을 모델을 구체화하는 것이 다음 단계 과업”이라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